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김영미 · 정덕재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영미¹ 정덕재²

¹부연구위원, 관세사

²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2025년 9월 2일

※허락없이 본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초록

본 연구는 할당관세 정책이 농축수산물 품목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로 소비자가격을 설정하고, 주요 설명변수로 할당관세율을 사용하며, 기본 관세율, 품목별 수요의 가격탄력성, 유통단계 수, 대체재 존재 정도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초회귀분석, 머신러닝 기법(Random Forest), 그리고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여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할당량 초과 여부에 따른 차별적 효과와 정책 시행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본 연구는 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선행 연구	7
제3장 데이터 구축	17
제4장 계절적 요인의 제거	17
제5장 기초회귀분석	23
제6장 인과관계 분석	27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1
A 주요 선진국의 할당관세제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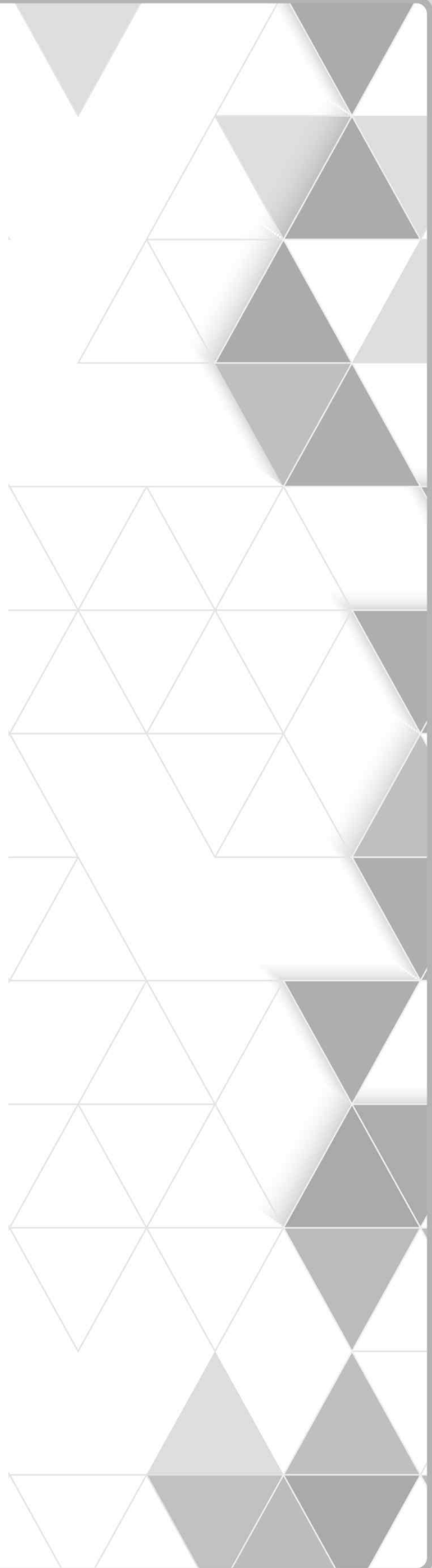
표 목 차

1	주요 선진국의 할당관세 제도 요약	37
---	------------------------------	----

그림 목차

1	시금치 도매가격	20
---	--------------------	----

제1장 서론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할당관세는 정부가 일정 기간 특정 품목의 일정 물량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원활한 물자 수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물가 안정, 불균형한 관세 구조 시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추가 작성 필요


한편, 본 연구의 경우 Jordà (2005)가 제안한 Local Projection 방법을 활용하여 관세 할당 조치 직후부터 최대 12개월까지의 충격반응 함수를 추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세 인하가 시차를 두고 가격과 수량에 미치는 동태적 경로를 살펴보겠지만, 분석 기간 12개월은 어디까지나 단기에 해당한다. 장기적인 효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며, 이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할당관세 조치가 2023년 말~2024년에 집중되어 있어 2025년을 넘어서는 충분한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할당관세 충격 후 12개월 이상의 장기 추이는 추후 자료가 축적되면 별도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동향과 본 연구의 기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가 최근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교한 실증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 보고서의 분석은 주로 거시 지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등에서 발간한 할당관세 효과 분석자료들을 보면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CPI)나 생산자물가지수(PPI)처럼 품목군별 가중평균 물가자료를 이용하여 관세 인하 효과를 평가한다(송영관, 2023; 장설희, 2025). 이러한 자료는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개별 품목 수준에서 정책 효과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CPI상 ‘채소류’ 지수가 하락했다고 해도, 이는 품목묶음 평균치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HSK 품목의 가격이 얼마나 내렸는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일부 품목(당근, 닭고기, 설탕 등)의 소비자물가를 개별적으로 보면, 관세 인하 이후에도 유의한 가격 하락 효과가 관측되지 않거나 다른 비용 요인으로 상쇄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장설희, 2025). 따라서 세부 품목별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미시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통계청·한국은행의 기존 물가자료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농넷(NongNet)의 HSK 10자리 세분류 수입가격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품목별 정밀분석을 시도한다. 품목별 세부 가격 및 수입량 변동을 추적하면서 앞서 논의한 가격전가 메커니즘과 유통단계별 이득 분배를 검증함으로써, 할당관세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크게 늘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가 2020년 20개에서 2024년 72개로 확대되었고, 전체 품목기준으로 관세 감면 규모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해 재정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다 (장설희, 2025). 그 중 약 66%가 물가 안정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과연 이러한 조치가 목표한 대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 인하 효과가 유통마진으로 흡수되거나 체감 물가에 미미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미시자료 분석은 정책 효과의 실제 크기와 한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를 제공하고, 향후 관세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시장 구조, 탄력성, 보완적 조치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 연구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2장 선행 연구

부록 A에서 언급했듯이 주요 선진국들이 할당관세제도를 본래의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를 물가안정의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가라는 연구주제는 국제적으로 희귀하다. 따라서 할당관세 도입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국내를 제외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장에서는 할당관세 보다 더 폭넓은 ‘관세’라는 관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관세 효과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가격전가이다. 가격전가율이 100%라는 것은,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조정을 수출국에서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조정이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반대로 가격전가율 0%는 관세 변동분을 수출업자가 모두 흡수하여 수입국 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다. 관세 인하의 전형적인 경제학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한다.¹ 수입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생산자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으며, 관세 인하로 비용이 절감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는 일부 이득을 취함으로써 마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관세 인하 효과의 이상적 경로다. 그러나 이 전달 경로마다 이득을 취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관세 혜택이 유통 주체들 간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시장 구조와 경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관세 인하의 이득이 도매상·소매상 등 중간유통 단계에서 상당 부분 흡수되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무역정책 효과에 관한 문헌에서는 환율 변동의 효과와 관세 변동의 효과가 흔히 밀접히 논의되는데, 두 경우의 가격전가 양상은 실증적으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부과된 미국의 관세는 수입가격의 90~100%가 거의 전부 전가(pass-through)되어 수입국(미국)이 그 부담을 떠안았던

¹다수의 연구에서 관세율 인하 \Rightarrow 수입품 증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또는 역으로 관세율 인상 \Rightarrow 수입품 감소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Amiti et al., 2019; Caliendo and Parro, 2015; Fajgelbaum et al., 2020; Muhammad et al., 2018; Hahn et al., 2019).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반면, 같은 기간 위안화 환율 변동이 수입가격에 미친 영향은 약 22% 수준에 그쳤다 (Cavallo et al., 2021). 이는 관세라는 정책 충격이 환율 변동보다 국내 물가에 훨씬 직접적이고 완전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² 이러한 차이는 관세가 정책적으로 부과한 가격 상승인 데 비해 환율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변화라는 점에서 비롯되며, 관세의 경우 수출업자가 가격 조정을 통한 흡수 여지가 적어 수입국 소비자가 거의 전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과 관세의 영향은 모두 무역품 가격을 통해 국내 시장에 전달되지만, 관세는 환율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완전한 가격전가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Fajgelbaum et al., 2020). 심지어 Flaaen et al. (2020)의 사례에서는 국내 제조사가 관세로 인한 외국 경쟁자 가격 상승을 틈타 오히려 자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전가율이 100%를 넘기도 했다.

결국 관세로 인한 가격 변동이 수입 단계에서는 거의 전부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그 인하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오롯이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러한 유통 단계별 이득 분배 문제는 관세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본 연구에서도 주목하는 주제다. 실제 사례로 Baek et al. (2021)의 연구는 일본 수입 도매업자의 관세 전가를 분석하여, 관세 인하로 도매상이 취하는 마진이 유의하게 상승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관세율이 1%p 인하될 때 수입 도매상의 마진율은 약 0.25%p 상승하였는데, 이는 도매상이 관세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분의 약 1/3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흡수했음을 뜻한다. 동 연구는 관세 인하 시 해외 수출업자도 자신들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를 보여 수입원가 하락폭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며, 반면 소비자 가격의 인하 폭은 매우 작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요컨대 관세 인하분의 분배를 살펴보면, 해외 생산자가 가장 큰 몫을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국내 도매업자가 상당 부분(약 1/3)을 차지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 인하로 기대되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유통단계의 마진 조정 때문에 크게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관세 혜택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박건영 (2015)는 설탕시장을 부분균형모형으로

²정확하게는 국경(수입자 총가격) 단계에서는 거의 완전 전가, 소매 단계에서는 제한적 전가가 이루어졌다.

제2장 선행 연구

분석하여, 과점 구조 탓에 소비자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었고, 할당관세 제도의 후생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세 변동의 효과는 단순히 이론상의 ‘가격 인하 \Rightarrow 소비자 혜택’ 도식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산업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할당관세처럼 특정 물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효과는 기존 관세 인하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할당관세는 일반 관세와 달리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몇몇 선행연구가 할당관세의 무역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예를 들어 Son and Lim (2025)은 관세율 할당제가 한국 곡물 수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으로 추정하면서, 할당관세 존재가 해당 품목에 사실상 높은 비관세장벽과 유사한 무역제한 효과를 초래함을 보였다. 실제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고율관세 때문에 억제되므로, 할당관세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다. 이 효과를 관세율 등가로 환산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품목인 쌀의 경우 할당관세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가 관세 약 102.6%를 부과한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쌀 할당관세가 수입량을 100% 이상의 관세 부과와 동일한 정도로 억제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할당관세 제도 자체가 그 도입 취지로써 수입억제 장벽으로 강력히 작용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 할당관세의 부차적인 목적인 국내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설탕에 대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할당관세로 관세를 낮춰도 시장 구조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 안유정 et al. (2022)는 수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운용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할당관세 할당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쿼터 소진율과 수입단가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매 방식의 할당관세는 낮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비교적 고가의 상품이 수입되는 경향이 있어, 할당관세로 수입된 물량의 단가가 일반 관세로 수입된 물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다만 동 연구는 소비자·생산자·수입업자 간 후생 또는 가격전가의 ‘정량적 귀착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의 전반적인 가격전가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선행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관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미시자료를 활용한 인과추론 접근과 거시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시 데이터 기반 연구들은 상품 또는 기업 수준의 세분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관세 변동의 인과효과를 회귀분석 등으로 식별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식별 전략으로 자연실험³이나 도구변수⁴를 활용하여 정책 충격의 순수 효과를 추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Amiti et al. (2019)*는 2018년 미국의 관세 부과가 소비자 가격과 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관세의 가격 전가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관세 부과분을 거의 전부 부담하게 되었고, 환율 변동에 의한 조정효과는 미미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관세 충격의 가격 전가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Cavallo et al. (2021)*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자연실험적 상황을 활용하여 차분-차분 기법으로 관세 영향을 식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관세 전가율은 95% 내외로 거의 완전전가인 반면 환율 변동의 전가율은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미시 증거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변화가 대부분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며, 수출국 생산자는 가격을 크게 인하하지 않고 이윤을 유지하려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Fajgelbaum et al. (2020)*은 2018년 무역전쟁 관세의 총후생 효과를 구조모형 추정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가 입은 후생 손실이 정부의 관세 수입 및 국내 생산자의 이익 증가분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아, 미국 경제에 연간 약 72억 달러⁵의 순후생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국내 이득보다 커서 경제 전체 파이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보호무역 조치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시장에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오히려 100%를 초과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현상까지 관찰된다는 것이다. *Flaen et al. (2020)*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2018년 미국이

³예컨대 차분-차분 모형을 사용한 예: *Cavallo et al. (2021)*, *Berlingieri et al. (2018)*, *Flaen et al. (2020)*.

⁴도구변수를 활용한 예로, *Fajgelbaum et al. (2020)*, *Baek et al. (2021)*, *Son and Lim (2025)*.

⁵단기(short-run)·2018년 조치 기준.

제2장 선행 연구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후 국내외 모든 세탁기 가격이 큰 폭 상승하여 전가율이 1.08~2.25로 추산되었다. 이는 관세 부과로 수입 세탁기 가격이 오른 것은 물론, 미국 내 생산업체(예: Whirlpool 등)도 국산 세탁기 가격을 덩달아 13~17% 인상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더불어 세탁기의 보완재인 건조기 가격까지 상승하는 등 간접 영향이 겹쳐 소비자들은 관세율 이상의 가격상승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는 관세로 인한 시장구조 변화(국내 업체의 가격 책정 전략 변화 등)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부담이 이론 예측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미시 데이터 접근의 강점은 이처럼 정책 충격의 직접 효과와 분배 효과를 단기간 내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개별 시장에 국한된 분석이므로 산업 간 파급효과나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거시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은 일반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 변동에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Arkolakis et al., 2019). 이들은 한두 개 품목의 미시적 효과보다 다양한 산업과 거시변수에 걸친 파급 경로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Döbeling et al. (2025)는 일반균형 모형으로 10% 균일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모의실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은 감소하지만 보복관세와 생산비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이 더 크게 줄어들어, 관세 부과 의도와 달리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입경쟁 산업은 보호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생산이 늘지만 수출 산업과 수입 중간재 의존 산업은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소폭(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농업 부문은 교역 위축의 타격이 커 주요 작물 생산이 평균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축산물 수출도 급감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하고 수입품 종류가 줄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거시 시뮬레이션 연구는 관세 정책이 거시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무역량 위축, 물가 상승, 후생 감소 등⁶)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별 사례를 넘어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⁶Berlingieri et al. (2018)은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의 거의 전부를 품질 향상이 설명하며, 전통적인 가격 하락이나 다양성 확대는 부차적인 역할만 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의 효과는 품목 특성이나 대상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품목별 차이에 따른 영향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 연구로 이영환 (2011)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수입 원자재 할당관세를 10% 인하할 경우 품목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극명히 엇갈렸는데, 원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원자재의 관세 인하 충격은 전기료와 연료비 인하를 통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0.8~1.8%가량 낮추는 반면, 밀·설탕 등 식료품 원자재의 관세 인하는 가공식품 가격에 일부만 반영되어 전체 물가 하락 효과가 0.03%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⁷ 이는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해왔지만, 정작 이러한 품목들의 관세 인하가 전체 소비자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치가 낮거나 생산원가 중 원자재 비중이 작다면 관세를 낮춰도 체감 물가 안정 효과는 미약하다는 뜻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관세 인하의 효과는 상품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의 경우 관세를 인하해도 소비량 반응이 작아 수입량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고 주로 가격 인하 효과만 나타난다. Muhammad et al. (2018)의 일본 쇠고기 시장 연구는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이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결과 수입 가격이 내려가고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⁸ 그러나 관세 인하가 모든 산업에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쇠고기 사례에서 관세 인하로 수입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은 낮아졌지만 전체 수입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소비재 제조업 등 다른 부문에서는 관세 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Bai and Stumpner, 2019). 실제로 Caliendo and Parro (2015)에 따르면 NAFTA 체결 이후 자동차, 전자 등 부문에서 수입재 가격의 뚜렷한 하락이 관찰되었다.

관세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비관세 장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관세와 비관세조치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TA를

⁷특히 천연가스 가격 10% 인하 시 전체 물가가 1.78% 내려가 가장 큰 영향을 보였는데, 같은 10% 인하라도 설탕의 경우 고작 0.0037%의 물가하락 효과에 그쳤다.

⁸다만 이 결과는 모형 기반 시뮬레이션의 예측이지, 통계적인 검증은 아니다. 또한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한 만큼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하였다. 결국 전체 수입산 쇠고기의 순증가는 예측되지 않았다.

제2장 선행 연구


체결하면 관세 인하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 규제 조화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도입된다 (Arita et al., 2017; Berlingieri et al., 2018). 2008년 세계 곡물위기 당시에도 많은 국가가 관세를 내리는 동시에 수출금지 같은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Jensen and Anderson, 2017). 한편, Arita et al. (2017)은 미·EU 간 무역장벽을 분석하면서, 관세만 제거하는 경우보다 GMO 규제,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 금지, 엄격한 검역 기준 등 주요 비관세조치(NTM)를 함께 완화할 때 무역 창출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관세만 철폐한 경우보다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동시에 완화한 경우 양자 간 농식품 교역량이 약 1.8배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 인하만으로는 관세+NTM 동시 완화 시나리오보다 효과가 작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수요·공급 탄력성 및 무역장벽 수준에 따라 관세 인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수요·공급 탄력성 및 무역장벽 수준)에 따른 그룹별 이질적 효과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비관세장벽(NTB)을 명시적으로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의 정확성을 도모할 것이다.

단기 vs. 장기 효과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실증 연구가 단기(1~2년 이내)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부는 관세의 장기적 영향까지 다루고 있다. 미시적 자연실험이나 회귀분석 연구들은 데이터 가용성과 식별 가능성의 한계로 인해 정책 발표 직후 몇 개 분기부터 몇 년 이내의 단기 효과를 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Amiti et al., 2019; Baek et al., 2021). 반면 관세 변화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나 생산성 영향과 같은 동태적 효과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장기 분석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장기 연구 사례로 Berlingieri et al. (201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소비자 후생 변화를 20년에 걸쳐 추적하였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직접 효과는 약 0.24%p에 불과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수입 제품의 품질 향상 효과가 매우 커서 소비자 후생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정책의 장기적 순기능은 품질 경쟁 촉진 등 구조적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관세 인하의 가격전가 효과는 이론적 기대와 달리 유통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의 마진 조정, 시장구조, 품목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약받으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물가안정 목적으로 운용하는 할당관세제도는 국제적으로 독특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이 일반적인 관세에 국한된 분석을 수행한 반면, 본 연구는 한국의 할당관세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인과추론 접근법을 통해 할당관세의 직접 효과를 식별하되, 비관세장벽, 수요·공급 탄력성 등 주요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품목별 이질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할당관세 정책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할당관세가 과연 정부가 의도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세 인하 혜택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제3장

데이터 구축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3장 데이터 구축

제4장 계절적 요인의 제거

각 품목별 가격 또는 판매량의 시계열 자료에서 계절성을 제거하는 것은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 사안이다. 농산물은 계절성이 짙는데, 할당관세 정책이 시작된 시점이 계절적인 변동시점과 겹친다면 문제가 된다. 가격의 등락이 할당관세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 단순한 계절적인 반복성 패턴 때문인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계열 상에서 계절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거해내는가는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간 및 일간 자료의 계절성 제거는 월별 자료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제시한다. X-12-ARIMA나 X-13-ARIMA-SEATS 등 공식 통계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계절조정 기법은 월별 또는 분기별 데이터를 전제로 개발되어, 연간 주기를 고정된 12개월 또는 4분기로 설정한다. 반면 주간 자료는 연간 52주 또는 간헐적 53주로 구성되며, 일간 자료는 요일 주기(7일)와 연중 주기(365일) 등 복수의 계절주기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비정형 주기성은 전통적 계절조정 알고리즘이 가정하는 고정 주기와 부합하지 않아 직접 적용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X-13 프로그램은 주기가 12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며, 주간 데이터를 월별로 집계하여 간접 조정하는 방식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집계 과정에서 주간 고유의 변동 특성이 소실되어 미시적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 접근법이 개발되었다. STL(Seasonal-Trend Decomposition using Loess)과 그 확장형인 MSTL(Multiple STL)은 임의의 주기성에 적용 가능한 비모수적 분해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STL은 로컬 다항회귀(loess) 기법을 활용하여 시계열을 계절, 추세, 잔차 성분으로 분해하며, 52주 또는 365일 등의 비표준 주기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MSTL은 복수 계절성에 대응하는 확장 알고리즘으로, 일간 데이터의 연간 주기와 요일 주기 같은 다중 계절 패턴을 동시에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추출한다 (Bandara et al., 2025). STL 기반 방법론은 구현의 용이성, 이상치에 대한 강건성, 그리고 계절 패턴의 점진적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STL 계열 방법은 계절 주기를 평활화하여 추정하므로 53주차나 윤년 등으로 인한 미세한 계절변동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추세와 계절변동을 반복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나 개입효과가 계절 또는 추세 성분으로 흡수될 위험이 있다.

계절 더미 변수 회귀는 계절성 제거의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시계열의 계절 패턴을 범주형 더미변수로 모형화하여 추정한 후 해당 효과를 제거하는 이 접근법은, 주간 데이터의 경우 1-52주차별 더미변수를, 일간 데이터의 경우 요일 더미와 연중일 효과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요일 더미와 푸리에 함수를 결합한 연중 주기 모형을 회귀분석으로 적합하여 계절성을 제거하였다. 이 방법론은 계절 패턴이 연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절 구성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주간 실업보험청구 건수 등의 지표에 대해 주차 더미변수 회귀방식을 장기간 활용해왔으며, Pierce et al. (1984) 등의 연구에 기반한 결정론적 계절요인 접근법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푸리에 회귀 (harmonic regression)는 과다한 더미변수 사용 문제를 완화하는 보완적 접근법이다.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활용한 푸리에 항은 복잡한 계절 패턴을 저차수 함수로 효율적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Hyndman and Athanasopoulos, 2018), TBATS나 Prophet 등 예측모형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본 연구는 연중 주기를 소수의 푸리에 항으로 근사하고 요일 더미와 공휴일 더미를 포함하여 캘린더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주기적 패턴이 완전히 제거된 시계열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더미/푸리에 회귀 방법론을 채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방법은 계절 변동의 완전한 제거를 보장한다.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계절효과를 원자료에서 차감하면 계절 구성요소가 식별가능성을 확보하며 완전히 소거된다. STL이나 이동평균 기반 방법이 경계 시점에서 계절 잔여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반면, 회귀 기반 방법은 53주차나 윤년 효과를 명시적으로 모형화하여 계절성을 기계적으로 제거한다. 둘째, 정책효과 추정의 왜곡을 최소화한다. DID 분석에서 처치효

제4장 계절적 요인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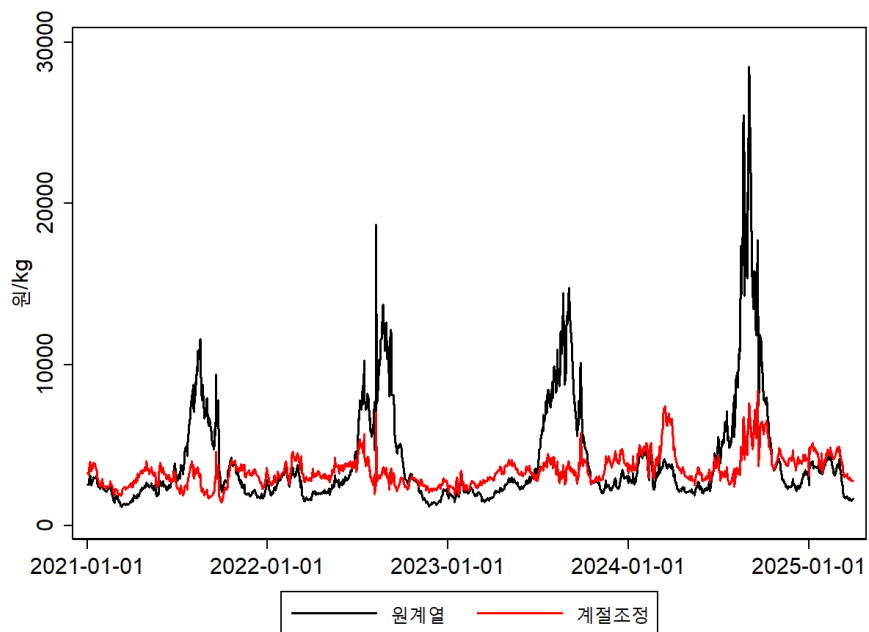
과나 구조변화가 전처리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계절 주기만을 제거하는 이 방법론은 정책 충격을 온전히 보존한다. 셋째, 주간과 일간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제공한다. 동일한 원리로 다양한 주기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 혼재된 패널데이터 분석에 특히 유용하다.


계절효과가 시변하는 경우 상태공간 구조모형(STS) 등 더 정교한 기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 동안 계절 패턴이 안정적으로 반복되므로 더미/푸리에 회귀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Mollins and Lumb (2024)의 최근 연구도 전통적 회귀 기반 방식의 효과성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절성이 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주간/일간 데이터에 대해 계절 더미 및 푸리에 회귀 모형을 통한 계절성 제거는 가장 확실하고 해석 가능한 접근법이며, 본 연구는 이를 계절조정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1은 시금치 도매가격의 원계열과 계절조정 결과를 예시로 보여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품목이 서로 다른 계절성 패턴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계절조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계절조정을 하는 R 코드는 각주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⁹

⁹https://github.com/jayjeon/github_TRQ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그림 1: 시금치 도매가격





제5장


기초회귀분석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5장 기초회귀분석

제5장 기초회귀분석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6장


인과관계 분석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6장 인과관계 분석

제6장 인과관계 분석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 Amiti, M., S. J. Redding, and D. E. Weinstein (2019). The impact of the 2018 tariffs on prices and welf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4), 187–210.
- Arita, S., J. Beckman, and L. Mitchell (2017).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on US-EU agri-food trade: What are the possible gains? *Food Policy* 68, 233–247.
- Arkolakis, C., A. Costinot, D. Donaldson, and A. Rodríguez-Clare (2019). The elusive pro-competitive effects of trad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6(1), 46–80.
- Baek, Y., K. Hayakawa, K. Tsubota, S. Urata, and K. Yamanouchi (2021). Tariff Pass-through in Wholesaling: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62, 101164.
- Bai, L. and S. Stumpner (2019). Estimating US consumer gains from Chinese imports.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1(2), 209–224.
- Bandara, K., R. J. Hyndman, and C. Bergmeir (2025). MSTL: A seasonal-trend decomposition algorithm for time series with multiple seasonal patt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52(1), 79–98.
- Berlingieri, G., H. Breinlich, and S. Dhingra (2018). The impact of trade agreements on consumer welfare—evidence from the EU common external trade polic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6(6), 1881–1928.
- Caliendo, L. and F. Parro (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2(1), 1–44.
- Cavallo, A., G. Gopinath, B. Neiman, and J. Tang (2021). Tariff pass-through at the border and at the store: Evidence from us trad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3(1), 19–34.
- Döbeling, T., S. Ikeme, and A. M. Countryman (2025). Tariff Troubles: Repercussions of Protectionist Policies on US Agriculture and the Trade Deficit. *The World Economy*.
- Fajgelbaum, P. D., P. K. Goldberg, P. J. Kennedy, and A. K. Khandelwal (2020). The return to protectio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1), 1–55.

참고 문헌

- Flaen, A., A. Hortaçsu, and F. Tintelnot (2020). The production relocation and price effects of US trade policy: The case of washing machin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7), 2103–2127.
- Hahn, W. F., S. S. Sydow, and W. P. Preston (2019). Revisiting US country of origin labeling trade damage estimates how does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perform under different scenarios.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Revue canadienne d'agroeconomie* 67(4), 349–361.
- Hyndman, R. J. and G. Athanasopoulos (2018). *Forecasting: Principles and Practice*. OTexts.
- Jensen, H. G. and K. Anderson (2017). Grain price spikes and beggar-thy-neighbor policy responses: A global economywide analysi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31(1), 158–175.
- Jordà, Ò. (2005). Estimation and inference of impulse responses by local proj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5(1), 161–182.
- Mollins, J. and R. Lumb (2024). Seasonal adjustment of weekly data.
- Muhammad, A., A. M. Countryman, and K. E. Heerman (2018). Effects of tariff concessions on Japanese beef imports by product and source.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47(1), 158–177.
- Pierce, D. A., M. R. Grupe, and W. P. Cleveland (1984). Seasonal adjustment of the weekly monetary aggregates: A model-based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2(3), 260–270.
- Son, E. and S. S. Lim (2025, March). Quantifying Tariff Equivalents of Tariff Rate Quota on Grains in Korea. *Research on World Agricultural Economy*, 1–15.
- 박건영 (2015). 할당관세의 후생효과에 대한 연구: 설탕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6(3), 45–62.
- 송영관 (2023).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 기획재정부.
- 안유정, 강한애, and 김봉태 (2022). 수산물 관세율할당제도의 운용방식에 따른 특성 분석. *해양정책 연구* 37(1), 215–235.
- 이영환 (2011). 할당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관세학회지* 12(4), 25–44.
- 장설희 (2025).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A 주요 선진국의 할당관세제도

본 장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할당관세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구조와 운영 방식을 비교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 (TRQ)) 제도를 운용하며, 이를 통해 민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각국은 대체로 일정 물량(quota)까지 낮은 관세율(in-quota rate)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out-of-quota rate)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TRQ 기제는 1995년 WTO 체제 도입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과정에서 널리 도입되었으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높은 관세로 초과물량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관세 기반 수입조치¹⁰’로 기능해왔다.

미국은 관세할당제(TRQ)를 주로 농축산물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은 설탕, 유제품, 땅콩, 쇠고기, 면화, 담배 등 다수의 민감 품목에 TRQ를 설정하여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설탕·땅콩 등에는 쿼터 초과 시 1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매겨져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TRQ는 품목별로 연간 할당량을 정하고, 일부 품목(예: 설탕)의 경우 공급국별 쿼터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미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위임된 권한으로 TRQ 저율할당 물량의 국가별 배분을 공고하며, 실제로 설탕 등 여러 품목의 저율할당물량이 국가별로 사전 배정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무역협정을 통해 TRQ 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 발효된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에서는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치즈, 분유 등 유제품 쿼터 확대 양허를 얻어내는 등 낙농품 TRQ 물량이 상호 조정되었다. 아울러 TRQ 운영 방식과 관련한 무역 분쟁도 나타났다. 2022년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TRQ 배분이 자국 수출업자에 불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제소하여, USMCA 분쟁조정 패널에서 캐나다가 일부 TRQ 물량을 자국 가공

¹⁰할당관세는 낮은 관세율과 높은 관세율을 결합한 관세 제도로서 WTO 규범상 허용되는 수입조치이므로,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1장 주요 선진국의 할당관세제도

업자에게만 배정한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은 EU·일본과의 철강 관세 갈등 해결을 위해 2021년 EU·일본과의 협상에서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TRQ 방식을 도입(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관련 합의)하는 등 당시 TRQ 개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보였다.¹¹

유럽연합(EU) 역시 다층적인 관세할당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통농업정책(CAP)에 따라 쇠고기, 설탕, 유제품, 곡물 등 여러 농산물에 TRQ를 설정하여 EU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WTO 약속에 따른 최소 시장접근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EU의 농산물 TRQ는 품목별 할당물량을 두고 선착순 수입 또는 수입권 공매 등으로 배분되며, 쿼터 외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다. 한편 EU는 자유탈당 관세(ATQ) 제도도 도입하여 산업 원자재 확보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산물 가공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 EU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어류·수산물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영(0)이나 저율로 일시 인하하는 ATQ를 시행하는데, 이는 국내 가공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 안정이 주된 목적이다. 이처럼 보호적 TRQ와 공급촉진형 TRQ를 병행함으로써 EU는 산업별 수요에 맞춘 탄력적 관세 운용을 추구한다. 최근 EU에서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TRQ 재조정 문제가 부각되었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EU가 보유했던 WTO 할당물량을 EU와 영국으로 분할 조정해야 했는데, EU는 2018년 이러한 TRQ 감축안을 WTO에 통보했으나 일부 수출국들의 이의 제기가 있어 GATT 제28조에 따른 재협상을 개시하였다. 이는 기존 쿼터의 배분 변경에도 관련 무역국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EU는 2023년까지 미국, 칠레 등 주요 교역국과 TRQ 분할에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으나, 여전히 일부 국가와의 협의는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EU는 최근 수산물 ATQ에 환경·노동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TRQ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일본도 관세할당(TRQ) 제도를 통해 농축산물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쌀·밀 등 주곡과 버터·치즈 등 낙농품이 대표적인 할당관세 적용

¹¹미국은 2025년 2월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한 기존 TRQ 합의를 철회하고 관세를 복원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대상이며,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수급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1999년 쌀 시장을 관세화하면서 최소의무수입물량(MMA)을 TRQ 형태로 운용해 왔는데, 정부 국영무역 기관이 이 할당 물량의 수입과 유통을 전담함으로써 수입쌀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있다. 밀·보리 역시 정부가 저율 할당물량으로 수입한 후 고정 가격에 재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구조다. 낙농품의 경우 국내 생산 부족 시 할당관세를 활용해 부족 물량을 메우는데,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은 버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버터 TRQ 물량을 당초 1만 톤에서 1만4천 톤으로 증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생산 감소 우려에 대비해 버터 재고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일본 정부가 TRQ를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이다. 일본의 TRQ 배정 방식은 국가별 쿼터를 두지 않고 총량 내에서 수입 물량을 관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쌀 TRQ 전체량은 유지하면서 그 내에서 미국산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할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쌀 TRQ를 미국·중국·베트남 등 공급국별로 고정 배분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쿼터 증대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물량 축소에 대한 당사국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운영상의 차이로 인해 일본은 통상교섭에서 유연하게 TRQ 물량 배분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2019년 미·일 무역협정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부 TRQ 확대를 용인한 바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기본 구조는 같지만 TRQ 운용 면에서 보다 탄력적인 배분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공급관리제도(Supply Management) 하에 유제품과 닭고기·칠면조 등의 가금류, 계란을 포함한 5대 축산품목에 엄격한 TRQ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캐나다의 할당관세 제도는 극히 낮은 수입쿼터만 허용하고 초과물량에는 매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자국 농가를 보호하는 구조다. 예컨대 캐나다는 우유·버터·치즈 등에 쿼터 외 수입 시 200~300%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는데, 실제 적용 관세율은 치즈 약 245%, 버터 약 298.5%, 액상우유 241%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초과관세 장벽 덕분에 쿼터 내 최소물량 외에는 수입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캐나다의 낙농·양계 농가가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도록 유지한다. 대신 캐나다는 WTO 및 FTA를 통해 약정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큼은 저율(또는 무관세)로 수입하는 의무

제1장 주요 선진국의 할당관세제도

를 지며, 이 물량을 국내 수요에 맞춰 연간 배정한다. TRQ 운용은 주로 수입 라이선스 할당 방식으로, 정부가 쿼터 물량을 자국 내 유통업체나 가공업체 등에 배분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이 배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미국-캐나다 분쟁에서는 캐나다가 유제품 쿼터의 85~100%를 자국 가공업자에게만 배정하여 미국 낙농업계의 실질적 접근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캐나다 측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최근 캐나다는 여러 FTA 체결로 국내 보호시장에 일정량의 추가 수입쿼터 개방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 CPTPP와 CUSMA(USMCA) 협정에 따라 유제품 및 가금류의 TRQ 물량이 단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는 자국 공급관리 체계의 점진적 약화에 대한 우려와 보상 논의가 일어나는 등 TRQ 확대가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여전히 높은 초과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쿼터 외 수입 차단이라는 할당관세 본래의 보호 기능을 견고히 지속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들의 할당관세 제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선진국의 할당관세 제도 요약

국가	제도 명칭	적용 품목
한국	할당관세	농산물, 에너지 등 125개 품목
미국	관세할당 (TRQ)	설탕, 유제품, 땅콩 등 주요 농산물
EU	관세할당 (TRQ) 및 자율할당 (ATQ)	쇠고기·설탕 등 농산물, 수산물 원료 등
일본	관세할당 (TRQ)	쌀·밀·보리 등 곡물, 버터·치즈 등 낙농품
캐나다	수입할당 (TRQ)	우유·치즈 등 유제품, 가금육·계란 등
주요 목적		최근 동향 및 이슈
한국	물가 안정 및 산업 보호	물가 상승 대응 위해 품목 확대 (긴급할당관세 시행)
미국	민감 산업 보호 및 시장접근 의무이행	USMCA로 낙농쿼터 확대 캐나다와 낙농 TRQ 배분 분쟁 발생
EU	농업 보호(CAP) 및 원자재 공급 보장	브렉시트로 WTO 쿼터 분할 재협상 중 수산 ATQ에 지속가능성 조건 검토
일본	국내 농업 보호 및 식량수급 안정	쌀 TRQ 국별쿼터 미설정 버터 부족 시 쿼터 증량
캐나다	공급관리 통한 농가 보호	FTA로 낙농 등 쿼터 확대 양허 초과물량 고관세 유지(버터 298% 등)

이와 같이, 할당관세 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시장 개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기본 구조는 모든 나라에서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유사하여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만 국가별로 세부 운영 방식과 정책 활용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캐나다가 국가별 쿼터 배분 및 엄격한 초과관세로 강한 보호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일본은 총량 내 배분 조정 등의 탄력적 운용으로 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EU의 경우 보호적 활용과 동시에 산업 원료 조달을 위한 예외적 할당관세를 병행하는 등 목적상 범용성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들 주요 선진국들이 TRQ 제도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할당관세제도를 물가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사례에서 할당관세 도입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타국 사례를 참고하되,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